

研究論文

조선공산당의 탁치노선 전환 이유 - ‘소련지령설’의 비판적 보완, 1945~1946 -

이 완 범*

I. 서론	III. ‘내적인식설’과 그 논리적 추론의 검토
II. ‘소련지령설’과 그 자료의 검토	IV. 맺음말: 질충론적 종합과 정설의 수정

I. 서론

1. 문제제기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싼 민족 내부의 논쟁은 한반도의 정치 지형을 좌우대립 구도로 재편하여 인위적으로 증폭된 채, 1948년 남북한 정부수립과 연결되었다. 결국 이 논쟁은 민족 분단과 직결되었으며 ‘骨肉相爭’인 전쟁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1946년 초의 신탁통치 논쟁은 남북분단의 내적 구조형성과 고착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신탁통치 논쟁은 한국현대사가 분단으로 향하는 계기가 된 최대 사건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약칭 ‘임정’)와 조선인민공화국(약칭 ‘인공’)의 지지를 둘러싼 대립을 보다 양극화시킨 첨예한 대립 이슈였다.

1946년 1월 3일,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신년 벽두, 조선공산당(약칭 ‘조공’)은 반탁에서 ‘찬탁’으로 노선을 전환했다.¹⁾ 이로서 시작된 좌우익간의 대립

*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 정치학 전공.

1) 서중석 교수는 전환 전후의 탁치에 대한 의미 규정을 달리하여 ‘전환’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

은 여러 우여곡절과 변형을 거쳐 지금까지도 지속되었으며 우리 이념논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탁치문제가 매개되면서 좌우대립은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한국현대사를 ‘분단시대사’라는 관점에서 조망한다면, 분단의 내적 구조를 형성한 탁치문제를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연구과제들 중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당연하다. 탁치문제 중에서도 조공의 노선전환문제는 좌우대립을 최초로 첨예하게 표출하였으므로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술이 그간 정설(定說)로 간주되어 왔다.

조선공산당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반탁에서 찬탁으로 하루아침에 표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노선전환의 이유가 과연 소련의 지령 때문만이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당시 우익진영은 조공이 소련의 지령 때문에 전환하였다고 선전하여 좌익은 ‘매국노’요 ‘소련의 앞잡이’라고 몰아 붙였다. 이러한 선전은 뒤에서 서술되는 바와 같이 확실한 증거(hard evidence)에 토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지령설’은 대중의 민족감정과 영합하여 후일 정설로 굳어지고 말았다.

분단시대가 개막된 지 60년이 지났고 냉전이 해체된 현시점에서 당시의 역사는 어떤 일방적인 ‘매도나 이데올로기의 틀 속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급진적인 역사연구가조차도 당시 조공의 노선전환을 ‘오류’라고 지적하는 마당에,²⁾ 노선전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노선전환의 과정과 그 이유를 최대한 객관적·가치중립적으로 기술(記述: description)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 자료에 의존하고 역사적 방법을 동원하여 이 문제에 관련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최대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공산당의 노선 전환이 공개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기 어려우므로 비밀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hard evidence)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자료의 행간에

즉 최초 ‘반탁’에서의 탁치는 위임통치이며 변화된 ‘찬탁’에서의 탁치는 후견(원조)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서중석, 「반탁투쟁과 자주적 통일민주국가 건설의 좌절」, 李泳禧先生華甲記念文集編輯委員會(編), 『李泳禧先生華甲記念文集』(두레, 1989), 112쪽.

2) 김종규, 『한국근현대사의 이데올로기』(논장, 1987), 124-125쪽.

숨은 이면을 들추어내기도 할 것이며 추론에 의지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경향에 주목할 수 있다. ‘소련지령설’에 대하여 외적 지령이 아닌 공산당의 내적 인식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주장들이 나왔다.³⁾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경향에 토대하여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서 조공 노선전환의 숨겨진 의도를 밝혀내 현실을 재구성해 보려고 시도할 것이다.

2. 문제를 보는 여러 가설들

조공의 노선전환 이유를 보는 가설은 黨의 안과 밖 두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가설은 당시에서부터 현재까지 학계를 지배하는 전통주의적 견해인바 당 바깥에서 당을 지휘 감독하는 소련이 일방적으로 지령하여 하루아침 사이에 전환하였다는 ‘소련지령설’이다⁴⁾

외적 지령설인 전통적 견해를 수정하고자 하는 가설들은 비교적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이강수 박사는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한 세력이 조공뿐만 아니라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백남운 세력, 심지어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 된 김병로까지 다양했는데 이들이 소련 지령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조공에게 소련 지령이 내려왔을 가능성에 대해 회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⁵⁾ 지령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조공은 소련의 괴뢰에 불과하다”⁶⁾는 기존인식에 회의하면서 조공이 친소적

3) 심지연, 「反託에서 贊託으로: 남한 좌익진영의 탁치관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2호(1988), 241쪽의 주<66>; 이완법, 「한반도 신탁통치문제 1943~46」, 김남식(외), 『解放前後史의 認識(3)』(한길사, 1987), 251~254쪽.

4) 남한에서 출판된 대부분의 역사서술이 이런 가설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음과 같은 책에서도 “소련영사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된다. 金南植 「南朝鮮勞働黨의 統一政策と戰略戰術」, 金南植・櫻井浩(共著), 『南北朝鮮勞働黨의 統一政府樹立鬭爭』(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1988), 11頁.

5) 李剛秀, 「三相會議決定案에 대한 左派3黨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집(1995). 그런데 이들의 지지노선 전환은 조공의 노선 전환 이후에 표명된 것이었다. 따라서 조공의 전환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조공에게 지령을 안했다면 이들에게도 안 내렸겠지만 조공에게 지령을 내렸다고 이들에게도 내리라는 법은 없다. 이들에게 지령내리지 않은 것이 조공에게 지령내리지 않은 것을 증명할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다. 이들의 경우 정치가 개인이 내적으로 고민한 결과이겠지만 조공의 지지 논리 주장에 동조했는가 아니면 당시 최대 정치 세력 중의 하나였던 조공의 노선전환을 대세로 받아들여 영합 내지는 편승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기는 하였지만 친미적인 우익(한민당·이승만)이 미국의 단순한 괴뢰가 아닌 것처럼,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정치세력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자율성을 가진 공산당이 당내적인 인식을 토대로 노선전환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내적 인식을 중시하는 입장(‘내적인식설’)은 노선전환의 의도를 구호 그대로 명분론적으로 해석하느냐 이념 뒤에 숨은 의도를 밝혀 현실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가설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설은 조공의 내적 분석 때문에 노선전환이 이루어 졌다고 주장한다. 통일과 독립을 지향한다는 조공 나름의 명분이 노선전환을 가져왔다는 ‘명분론적 검토설’이다.⁷⁾ 이에 비하여 두 번째 가설은 ‘권력 투쟁설’이다. 이는 조공이 내적 검토와 분석 하에 신중하게 노선전환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첫째 가설이 중시하는 통일독립이라는 이념을 현상 그대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 숨어있는 현실정치적인 의도를 캐내자는 입장이다. 즉 통일독립이라는 구호는 단지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호이며 노선전환의 주요 동기는 정권을 잡기 위한 의도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장악을 위한 내적 인식을 노선전환의 주요

6) 당시 미국의 인식에 의하면 남한의 조선공산당은 소련의 조종을 받는 집단이었다.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eriod of September 1945 to 30 June 1946,” Manuscript in the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 C.(Seoul: Office of Administrative Service, Statistical Research Division, 1946-1947), Vol. I, part I, chapter VI, p. 219;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 1946*, Vol. VIII(Washington, D.C. :USGPO, 1971), p. 733.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미군정이 자문을 구했던 일본총독부 관리나 우익 통역관들의 작용 때문에 형성된 것 같다.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History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Manuscript i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 C.: Seoul and Tokyo, 1947, 1948)(이후부터는 “HUSAFIK”으로 약하여 인용함)에서는 공산주의 자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outside control)의 증거는 없지만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HUSAFIK,” part II, chapter I, pp. 24-27. 또한 고준석의 증언에는 당시 “거의 모든 공산당원이 소련을 우상처럼 떠받들었다”고 나와 있다. 高峻石, 『아리랑섬의 여: 朝鮮女性革命家への回想』(東京: 田畑書店, 1974); 고준석(著) 유경잔 재구성, 『아리랑고개의 여인 어느 조선 여성운동을 회상하며』(한울, 1987), 101쪽. 그러나 위 기록에서도 당시 소련에 대한 비판이 기술되어 있다.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떠받들’과 ‘지배가능성’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서대숙 교수는 1945년 12월의 시점에서 소련이 남한의 공산당을 전적으로 통제했을 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련지령설’을 부인하고 있다 Suh, Dae-Sook,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 306.

7) 심지연, 앞의 논문, 241쪽의 주<66>.

한 동기로서 보는 것이 ‘권력투쟁설’의 입장이다.⁸⁾

본 연구자는 이러한 견해를 앞에 놓고, 각 견해가 주장하는 요인들이 각기 배타적으로 작용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절충론적이며 복합론적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 즉 지령과 내적 인식 중 어느 것이 보다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는 했어도 어느 것 하나 때문에만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노선전환 요인을 각 가설별로 그 증거를 토대로 검토한 후 종합하고자 한다. 먼저 노선전환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일지로 만들어 그 요인을 추출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표 1> 조선공산당 탁치 관계 노선 전환과정 일지

1945년	10월 23일	(‘미국탁치주장’설 보도) 직후: 반탁(조공)
	12월 27일	(‘소련탁치주장’설 오보): 공식성명 보류(조공)
	12월 28일~1946년 1월 2일	사이 박헌영 평양행 추측
	12월 31일~1946년 1월 1일	인공 임정간 합작노력과 그 실패 조짐 보임
	12월 31일:	‘반탁’이란 말 쓰지 않고 ‘절패’로 표현(조공)
	1월 1일:	김일성, 신탁을 ‘문제’로서 인식
1946년	1월 1일:	‘신탁문제해결’로 표현(조공)
	1월 2일:	조공, 김구 일파의 반탁비판하면서 삼상결정을 ‘진보’라 규정
	1월 2일:	조공북조선 분국 삼상결정에 대한 전폭적 지지 표명
	1월 2일:	인공, 삼상결정 전면적 지지 표명
	1월 2일 오후(저녁10):	조선공산당 서울 중앙의 모스크바 결정지지 지령이 하급 당부에 전달됨
	1월 3일:	조공, (신탁철폐 위하여 민족통일전선 결성하여) 삼상결정 절대 지지

위의 일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공의 노선전환은 여러 날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 졌다. 위에서 노선전환의 요인들과 연결되는 몇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첫째, 소련의 지령설을 추측하게 하는 사실로서 12월 27일 소련을 의식한

8) 이완범, 앞의 논문(1987), 253~254쪽. 이 글에서는 ‘체계모니 쟁탈설’과 ‘공산화 기도설’로 나누어 보고 있다.
 9) 조선공산당 전라북도위원회 위원 河駿麒와 조선공산당 서울시 영등포지구위원회 위원 具小鉉, 陳麒奉, 「현중앙에 대한 우리의 견해」(1946년 3월 7일),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朝鮮共產黨文件資料集(1945~46)』(翰林大學校 出版部, 1993), 296쪽
 10) 조선공산당서울시영등포임시지구상무위원회, 「全鮮黨員同志들에게訴함」, 黨外秘(1946년 2월 13일),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편), 위의 책, 362쪽.

태도 표명 보류와 뒤이은 박헌영의 평양행 추측이다. 또한 지령의 시점을 추측하게 하는 사실로서 1945년 12월 31일에 작성되어 1946년 1월 1일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남북 공산당은 공히 탁치에 대하여 전면적 지지의 태도를 아직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로 인식하거나(김일성), 반대(남한의 조공)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지령이 있었다면 1945년 12월 31일부터 다음해 1월 1일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노선변경의 시점과 ‘권력투쟁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실로서 인공 임정간 협력노력이 실패한 1946년 1월 1일 직후 이의 반작용으로 노선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셋째, 노선전환 과정을 거시적으로 조망해 볼 때, 조공의 인식이 반탁→철폐→해결→지지의 구호 변화 속에 점진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기에 그들의 내적 인식이 매우 신중하게 복합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내적 인식설’을 합리화 시켜주는 증거의 단초를 포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측을 토대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여 각 가설을 검토해 볼 것이다.

II. ‘소련지령설’과 그 자료의 검토

소련의 지령설을 검증하려는 몇 가지 문헌에 나타난 구체적 증거를 들어보고자 한다. 첫째로 1946년 5월 22일, 23일자 양 일자 《동아일보》에 대대적으로 공개된 다음의 소위 ‘지령문서’이다

1946년 1월 3일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책임비서

각급당부 책임비서압

- 모스크바 삼상회담에서 결의된 조선문제에 대한 결정서에 관하여 각급 당부에게 주는 지시서 -

1. 금반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소미영 3 국외상회담에서 결정한 조선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 조선정세에 있어 가장 정당한 결정이라고 당에서는 인정하는 동시에 금반결정을 전적으로 동의 지지하며 전당압에 다음과 같은 인식이 있기를 지시한다.

2. ‘금반회담에서 결의한 조선문제에 대한 결정은 1943년 11월 카이로에서 개최된 소·영의 오식암 인용재-마 중3 수상회담에서 결정한 것보다는 진보적이며 급속적으로 조선의 진정한 민주주의적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도록 하였으며 ‘금반 모스크바 외상회담의 결정은 남북조선의 분리를 속히 청산하고 조선에 통일적 정권을 수립하는 전제조건’이라고 인식시킬 것...‘당은 금반 회담의 결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모든 실지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 행동이 있어야 하겠다.’¹¹⁾

그런데 이 문서는 미군정 정보담당부서(G-2 Section)가 남한으로 월경하는 한국인에게서 1946년 4월초 입수한 것이다¹²⁾ 미군 정보기관은 이를 토대로 지령이 있었음을 증명하려 하였으며 이 문서를 당시 우익지 《동아일보》에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유출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이것이 ‘지령설’을 입증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구체적인 증거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문서 어느 구절에도 소련은 언급되지 않으며, 이는 이미 남한의 인공 방향전환을 표명한 1월 2일의 하루 뒤인 1월 3일자의 것이다. 북조선분국 책임비서(김일성)가 수신자인 각급당부에게 보낸 것이다. 여기서 각급당부라 함은 분국에 예속된 북조선내의 하급당부 일 수 밖에 없다.¹³⁾ 또한 이 문서는 1946년 1월 3일자 조공 북조선 분국 김일성 명의의 “3상회담서 결정된 문제에 대해 각급당부에 지시”라는 같은 일자의 《해방일보》 소재 문서¹⁴⁾와 서두가 같으며 후반부에도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11) 《동아일보》 1946년 5월 22일.

12) “Communist Party Instruction on Moscow Decision”(3 January 1946), Inclosure No. 2 to XXIV Corps, in HQ USAFIK, “Weekly Summary,” No. 32(24 April 1946). 이 문서는 번역되어 4월 23일 상부에 보고되었는데 “HUSAFIK,” part II, chapter IV, pp. 79-80 에도 전제 수록 되어 있다.

13) 위 문서의 후반부 행동지침 중 “각 부에서는...선전인재를...도당부로 다리고 와서 분국에 보내야”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분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므로, 북조선 분국이 하급당부에 보낸 것이라고 확증할 수 있다.

14) 《解放日報》 1946년 1월 21일.

따라서 《동아일보》 문서는 《해방일보》 문서를 변형한 것이거나 아니면 《해방일보》 문서와 비슷한 다른 문서일 것이다. 변조되었건 별도의 문서이던 간에 《동아일보》 문서는 평양의 상급당부가 북한 내 하급당부에게 내리는 단순한 지시서가 월경하는 한국인에 의하여 우연히 입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남한의 공산당 중앙이 북한의 하급당부로부터 지시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문서로서 ‘소련지령설’ 내지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남한 조공에 대한 지령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자료의 설득력은 없어지며 이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미군정 혹은 《동아일보》의 확대해석 아니면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서를 지령설의 증거로 제시했던 언론의 책임을 지적할 수 있다.

두 번째 증거는 해방직후 조공 경기도당 청년부 책임자 박일원의 다음과 같은 증언이다.

3상회담결정이 발표되자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강진을 소련영사관에 파견하여 영사 싸부싱과 회담하고 또 1월 2일 총비서 박헌영이 북한으로부터 귀환하여 급급히 안국동 나동옥씨택에서 중앙확대위원회를 소집하여 여러 중앙위원회[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상결정절대지지를 강압적으로 결의시키고¹⁵⁾

그런데 박헌영의 평양행 증언을 문자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다.¹⁶⁾

-
- 15) 朴駟遠, 『美蘇共委와 南勞黨의 欺瞞(上)』, 《大東新聞》 1947년 10월 28일; 朴駟遠, 『南勞黨批判(上)』(極東精版社, 1948), 42 쪽
- 16) 홍태식(당시 조선공산당 서울시당 문화부장)과 박갑동의 증언에 따르면 박은 당시 몸이 쇠약해져서 직접 이북에 갔다 올 형편이 못 됐다는 것이다. 조규하(외), 『남북의 대화』(한얼문고, 1972), 208쪽; 朴甲東, 「내가 아는 朴憲永(77): 蘇聯領事館의 조종」, 《中央日報》 1973년 5월 26일 고준석의 경우 박의 평양행을 지적하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막연한 소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高峻石, 『南朝鮮勞動黨史』(東京 勁草書房 1978), 118頁 하성수(엮음), 『남로당사』(세계, 1986), 208쪽; 高峻石, 『朝鮮 1945~1950 革命史への證言』(東京 三一書房, 1972); 고영민, 『해방정국의 증언: 어느 혁명가의 수기』(사계철, 1987), 91쪽 또한 박의 측근 인사였던 박갑동의 경우는 그의 단행본에서 《중앙일보》 연재물과는 달리 박이 평양에 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 발표가 없었으며 박은 평양에서 ‘찬탁’의 지시를 받아 1월 1일 밤 38 선을 넘었다고 증언한다. 朴甲東, 『朴憲永』(인간사, 1983), 134~136쪽 중앙일보 연재물에서는 위와 같

또한 중앙당도 아닌 지방당의 일개 간부가 어떻게 박헌영의 일거수 일투족을 위와 같이 알 수 있었느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자료와의 교차비교를 통해 비교적 사실에 근접해 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는 결정을 둘러싼 분위기를 아는데 유용하다. 당시 조공이 소련영사관에 자문을 구했던 사실과 삼상결정지지 가결과정에서 당내에 반발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세 번째 근거는 당시 김일성의 측근기자였던 한재덕의 보다 구체적인 증언이다. 그에 의하면 소련은 평소에 지령을 당일에 즉각적으로 내렸으나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라는 지령은 평소보다 이틀 정도 늦게 내려왔다는 것이다.¹⁷⁾ 또한 한재덕의 증언을 인용한 박갑동에 의하면 “46년 1월 초하룻 날인가”에 소군 사령부로부터 지령을¹⁸⁾ 받았다는 것이다. 전향한 후에 작성한 증언으로서 의심 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어느 누구보다 비교적 진실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박갑동은 다른 증언에서 소련의 지령이 서울의 중앙당부에 전달된 것은 김일성에의 지령보다 하루 늦은 1월 2일이라고 추측했다.¹⁹⁾ 이 추측은 남한의 공산당이 북한의 공산당보다 일관성 없이 뒤늦게 태도 표명을 했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이에 의하면 소련군 주둔이라는 유리한 위치에 있던 ‘북조선 분국’이 보다 일관적인 태도를 표명한 덕분에 이 시점부터 남한 공산당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모스크바에 있었던 민정사령관 로마넨코와 서울 주재 소련영사관 총영사 폴리안스키가 평양과 서울로 돌아와서 모스크바결정에 대한 설명을 아직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평양은 태도 표명을 유보했던 것이다.²⁰⁾

만약 지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느 기관에서 남한공산당에 지령하였는가’가 중요한 쟁점이다. 재경 소련영사관²¹⁾인가 아니면 평양에 있는 주둔군

이 박의 평양행을 부인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재경 소련영사관 1월 2일 지령설을 증언했었다. 이렇게 증언이 엇갈리므로 신뢰성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17) 韓載德, 『金日成을 告發한다』(内外文化社, 1965), 237~239쪽.

18) 朴甲東, 「내가 아는 朴憲永(73): 표면한 反託」, 《中央日報》 1973년 5월 22일.

19) 위의 글.

20) 朴鍾晟, 『朴憲永論』(인간사랑 1992), 154 쪽

21) 박갑동은 “소련 영사관에서 지령을 받은 걸로 추측 한다 朴甲東 「내가 아는 朴憲永(77)」

사령부인가? 아니면 북한의 공산당인가? 먼저 당시 남한의 공산당은 북한의 공산당에 대한 형식적이거나 상급당부이었으므로 북의 공산당이 지령을 내렸을 가능성은 없다.

이상과 같이 구체적 물증으로 지령설을 검증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서 이러한 류의 지령은 문서로 남기지 않았을 것이며, 보안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박갑동도 “소련의 지령에 따른다는 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박헌영]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소련의 지령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²²⁾

이런 문서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들의 증언이 중앙일보에 의해 발굴되었다. 노동당 고위 중앙간부(통일전선부 부부장)를 역임했던 서용규(가명)²³⁾는 이 시기 박헌영이 평양에 갔었다고 회고했다. 박헌영은 1945년 12월 28일 밤 서울을 출발하여 29일 오후에 도착하였으며 30[혹은 31]일에 로마넨코를 만나 신탁통치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들었다는 것이다. 로마넨코는 “미국이 신탁통치를 주장해 하는 수 없이 절충안으로 5년간 후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후견제는 신탁통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헌영은 1월 2일 귀경하여 입장을 전환했다는 것이다.²⁴⁾

1945년 12월 29일의 김일성·박헌영 회합에서 박헌영은 서울중앙 내부에서의 신탁통치문제를 논의했다. 이때 이미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남에서 신탁통치문제로 소란스럽고 공산당도 반탁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박헌영이 이남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미 반탁조치를 취했다고 말하자 이미 알고 있었던 김일

22) 위의 글.

23) 그는 대남공작을 담당했던 장관급 인사로서 증언 당시 유럽에 망명 중이었다고 함.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중앙일보사, 1993), 26쪽. 박헌영 숙청 사건 때 주영하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의 자술서를 검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김일성과 박헌영과의 만남은 직접 수행했다고 한다.

24) 《中央日報》 1991년 11월 21일. 그런데 서용규의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상당히 오래 된 일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HUSAFIK,” part II, chapter I, p. 24에 의하면 1946년 1월 1일 박헌영이 하지와의 인터뷰에서 탁치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신문 등의 공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미군정의 미공간원고(manuscript)에만 나와 있으므로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 박이 반탁의 입장을 보인 것은 다른 어느 자료에도 없으므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1월 1일이나 그 이전에 귀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성은 입맛만 다시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12월 30일 오후에 김과 박이 배석한 가운데 공산당 간부들의 협의회가 열렸는데, 훗날 박헌영은 자술서에서 이날 자리에 대해 “분국지도부 동지들 앞에서 서울 중앙의 반탁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나 자신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썼다. 왜냐하면 3상회의 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소련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조선공산당 서울중앙이 반탁을 결정하여 성명서를 채택하고,25) 대회를 개최하는 등 너무나 서둘러 앞서 나갔었기 때문이다. 결국 박헌영은 이 자리에서 김일성에게 서울 측의 판단착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그 수습책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2월 31일 오전 회의에서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정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 안건은 주로 임시정부 수립문제를 포함한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 4조였다. 로마넨코는 평양으로 돌아오자마자 소련 측 견해와 미국 측 견해가 서로 달랐음을 설명했고, 특히 미국이 신탁통치를 주장하므로 하는 수 없이 절충안으로 5년간 ‘후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후견제는 신탁통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는 것이다. 소련의 설명을 듣자 박헌영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서울에서는 31일 소련 타스통신이 후견제 실시를 보도하자 서울의 소련영사관은 조선공산당 중앙의 이승엽, 김삼룡에게 소련의 입장을 상세히 통보해 주었다고 한다. 30일과 31일 사이에 소련의 입장이 결정되었으며 이때 박헌영 측에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다.26)

그런데 다른 인사들은 박헌영의 평양행 일자에 대하여 다르게 증언했으나 서용규의 증언보다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27) 여러 자료와 증언을 종합할 때 박헌영이 1945년 말~1946년 초 언제 인가에 평양을 다녀왔던 것은 사실로 추정되며 소

25) 당시 명시적인 반탁 성명서 채택은 없었으므로 이는 1945년 10월 31일 《해방일보》의 성명이거나 12월 하순의 조공 요인의 개인적 태도 표명 혹은 1945년 12월 31일의 조공 서울시위원회 1946년 1월 1일의 조공 중앙위원회의 성명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26) 朴鍾辰, 앞의 책, 154~156쪽.

27) 당시 소련영사 사브신의 부인 콜리코야는 1946년 1월 5일부터 10일 사이라고 하며, 당시 소련군 정치담당관이었던 메클레르(Gregory K. Mekler) 증좌는 1945년 12월 20일에서 25일 사이로 기억하였으며[그러나 그는 1945년 말이나 1946년 초에 평양에서 박헌영과 단독으로 만났다고 증언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일보사, 1992), 106쪽, 박길룡은 1946년 1월 중순이라고 증언하였다. 《中央日報》 1991년 12월 5일.

런군 사령부로부터 ‘명령식 설득 28)을 들었던 것도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문서에 나타난 증거 이외에 ‘심증’을 종합해 추론을 완결할 것이다. 북한 공산당이 비교적 일관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은 그들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에 대한 의식’ 때문이다. 또한 남한의 공산당이 북한의 공산당에 탁치문제에 관한 한 주도권을 빼앗기면서까지 노선전환을 해야만 했던 데에는 당 외부의 어떤 외부적 힘으로서의 ‘소련의 종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가설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인식론적 기초(조공은 소련의 괴뢰이다)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출발하여 지령설을 비판적으로 인식해 보고자 한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과연 소련의 괴뢰였을까? 지령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소련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정도는 인정한다(주<6> 참조).

자율성을 인정하는 시각에서 지령설의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지령설’을 부정하기보다는 ‘종용설’이라고 수정하면서 인식할 것을 제안한다. 소련이 행한 것은 일방적 지령이 아니라 종용이며 협조요청이었다는 주장이다. 협조 요청도 강압적 분위기 아래 행하여 졌다면 받는 측의 입장에서 볼 때, 지령보다 더한 ‘강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소련과 공산당은 종속관계가 아닌 자율성이 조금이나마 있는 나아가서는 이념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므로 지령이나 강압으로 느끼진 않았을 것이며 충고나 종용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령이나 종용의 차이가 그렇게 부각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²⁹⁾ ‘강압적 지령’(종속관계)과 협조 요청의 하나인 종용(자율성이 없는 것은 아닌 관계)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한 미군정이 그랬었던 것처럼 소련도 북한 내 정치세력에게 “반탁을 하지 말아라, 모스크바결정은 독립에 이르는 길이다, 모스크바결정을 왜곡하지 말아라” 등으로 회유했을 것이다. 또한 소련은 조만식에게 그랬던 것처럼

28) 《中央日報》 1992년 2월 10일.

29) 2003년 5월 2일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학술발표회장에서 하영선 교수는 소련의 종용이 거부할 없는 것이므로 지령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김계동 교수는 찬탁 인사를 장차 수립될 입정에 포괄시키기 위해 소련이 지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남북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중용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미·소의 중용에 대하여 남한의 우익 정치세력들은 주체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거부하였지만, 남북 공산당은 역시 내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접수했던 것이다(그런데 결과는 거부와 접수의 대비적 상황만이 돋보였다).

즉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외적 중용을 받았을 때 과연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함으로써 국내 정치의 권력투쟁과정에서 얻는 득은 무엇인지를, 이전까지 고민했던 내적 대의명분과 논리에 비추어 분석했을 것이다. 따라서 방향전환의 기본적인 동기는 소련의 중용이 유발했지만, 최종적인 노선의 결정은 결정 당사자인 공산당의 내적 인식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따라서 다음에 언급할 ‘내적인식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I. ‘내적인식설’과 그 논리적 추론의 검토

내적인식설의 증거를 지령설의 증거와 비교해 볼 때, 이 가설이 구체적 자료보다는 논리적 추론에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내적인식설은 ‘심증’에 토대하고 있으므로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비교적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던 지령설도 그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본 필자가 확인하면서 ‘지령의 심증’에 의하여 보완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내적인식설의 심증’에 의하여 지령설의 설득력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설명력을 상실할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 추론의 개연성을 입증한다는 입장에서 문제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조선공산당 내부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가 있었다는 증거들은 많다. 실제로 1945년 12월 말경 조공 내부에서 신탁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탁치를 지지할 것을 건의한 경우도 있었다.³⁰⁾ 또한 조공 대변인 김삼룡은 이미 1945년 10월 “신탁통치문제에 대해 소련이 어떤 조치를 취할는지 확실히 모른다…신탁통치에 대한 비난을 유발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한

30) 이렇게 일찍부터 지지노선을 건지했다는 이와 같은 설명은 물론 사후적(事後的)인 주장이라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朝鮮共產黨 서울시 永登浦 臨時地區 常任委員會 「全鮮黨員 同志들에게 訴함」(1946년 2월 13일) 19쪽,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편), 앞의 책 362쪽

적이 있었다.³¹⁾ 한편 좌익의 신년 담화에서 탁치문제에 대한 찬성·반대의 언급이 없었으며 조공의 기관지 《解放日報》가 1946년 1월 1일부터 5일간 발행되지 못했던 것 등의 사례에서 조선공산당은 내적으로 고민하고 있었음이 확인될 수 있다.³²⁾

1. '명분론적 검토설'의 비판적 해석

이 가설의 전제는 전술한 바대로 조공이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여러 차원의 검토와 분석을 거쳐 신중한 노선전환을 했다는 데에 있다. 나름대로 검토 결과 모스크바 결정이 당시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통일독립에 가장 적절한 결정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전환하였다는 설명이다. 즉 이 가설은 조공의 표면적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여, 노선전환의 주요한 이유를 대의명분과 이념적 현실인식에서 찾고 있다.

위 가설은 조국이 결국 분단된 상황을 돌이켜 보면서 당시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했다면 통일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즉 모스크바결정 실천의 길이 유일한 통일의 길이라는 ‘모스크바결정=통일론’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결정=통일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가능하다. 이미 미·소에 의하여 분할 점령된 상황에서 모스크바결정에 의한 통일이 가능했겠느냐는 주장이 이 가정을 무색하게 만들며, 노선전환을 하지 않고 “반탁으로 뭉쳤다면 탁치를 거치지 않은 통일이 되었을 것”이라는 반대되는 가정이 이 가설의 배후인식을 부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가설에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하루아침 전환설’을 평가절하 시켰으며 공산당의 상대적 자율성과 노선전환을 둘러싼 내적 노력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당시 조공 성명서이다. 노선전환 과정에서 즉시 독립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것이나 신탁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통일전선의 결성을

31) 《매일신보》 1945년 10월 25일. 신복룡 교수는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한울, 2001), 314쪽에서 김삼룡의 성명은 소련의 의중을 의식하는 것이므로 공산주의의 찬탁 논리를 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같은 좌익인 여운형의 경우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탁치를 지지했다고 신복룡 교수는 평가했다.

32) 李剛秀, 앞의 논문, 311~312쪽.

제의한 것에서 내적 고민을 읽을 수 있으며, 노선전환 후에 발표한 수다한 성명서에서 “독립을 위한 방도이기 때문에 모스크바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고 언명한 것이 바로 이 가설을 합리화시켜 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현실정치라는 것은 표면에 드러난 대의명분만 가지고 인식할 수는 없다. 이 가설의 약점은 대의명분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과장하는 데에 있다. 이 가설과는 반대로 대의명분 뒤에 숨겨진 정치적 현실주의 논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노선전환을 했을 때 현실적 권력투쟁 과정에서 얻는 것이 없을 것이라 인식했다면 과연 현실정치 무대에서 노선전환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권력투쟁설’을 논증할 것이다.

2. ‘권력투쟁설’: ‘헤게모니쟁탈설’과 ‘공산화기도설’

이 가설은 노선전환의 기본적 요인을 이념적인 데서 찾지 아니하고 정치의 냉엄한 현실에서 찾는다. 이 이론에 의하면 현실정치 논리란 바로 권력투쟁(power struggle) 논리이다 즉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승리한다는 목적에 복무하기 위하여 노선전환이라는 수단이 시도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단으로서의 노선전환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를 부여한 목적으로서의 권력투쟁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연구테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조공이 인식한 권력투쟁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은 당시 반탁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임정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이었다. 권력획득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국의 주도권을 임정으로부터 빼앗아야 한다는 단기적인 현실인식을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조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단기적 ‘주도권(=헤게모니)쟁탈설’과 장기적 ‘공산화 기도설’의 논리적 기초를 세울 수 있다. 이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헤게모니 쟁탈설’의 요점은 이러하다. 임정의 반탁운동 주도로 인하여 반탁정국에서 헤게모니를 잃은 인공이 헤게모니를 탈환하기 위하여 임정에 합작을 제의하였는데 이것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자, 임정과 같이 반탁의 길을 걷는 것은 인공의 노선이 임정의 헤게모니 아래 휘말리는 결과³³⁾를 가져올 것이므로 다시 주도

권을 탈환하기 위하여 임정과는 정반대의 노선으로 선회하였다는 것이다. 고준석(당시 조선공산당원)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여 이런 상황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조선공산당은 보수세력들이 함부로 날뛰는 것에 의심을 가지면서도 ‘버스에 늦게 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여 활동(반탁활동: 연구자 주)을 서둘렀다…그러나 조선공산당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으로 인해 야기된 새로운 정치정세 속에서 그들의 헤게모니를 다시금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그래서 그들은 1946년 1월 3일에 50만 이상(조선공산당 발표자수)의 서울시민을 동원하여 ‘모스크바삼상회의 지지’를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³⁴⁾

헤게모니 쟁탈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서는 지지노선으로 전환되기 전 후 공산주의자들의 성명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하나 같이 임정 주도의 반탁운동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은 임정 헤게모니에 대한 견제이며 따라서 좌익이 탁치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함에 있어 임정 주도 반탁운동을 견제하여 임정 주도권을 탈취하려는 기도가 하나의 요인으로서 개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헤게모니 쟁탈설’과 연결될 수 있는 ‘공산화 기도살’이 언급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현재 미국점령 상태보다 소련 참여 하의 탁치가 자신들의 세력 확장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³⁵⁾ 따라서 미군정통치의 현상태를 지양하기 위하여 삼

33) 최상룡 교수도 “우파의 리더십에 따를 수도 없었던” 조공의 고민을 지적하고 있다. 崔相龍 『美軍政과 韓國民族主義』(나남, 1988), 210쪽. 커밍스는 이니셔티브 쟁탈의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Vol. 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 224; 이호재 교수는 미군정과 우익의 결합을 견제하려는 조공의 의도를 지적하고 있다. 李昊宰 『韓國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法文社, 1969), 170쪽. 이동현 박사도 『한국신탁통치연구』(평민사, 1990), 103~104쪽에서 우익의 단합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노선을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우익이 단합해서 주도한 반탁운동에 좌익이 가세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면 운동의 주도권을 계속 우익이 가지는 결과가 되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34) 高峻石, 前掲書(1972); 고영민 앞의 책 91, 95 쪽

35) 서대숙도 이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좌익은 5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치는 것이 공산화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Suh, *op. cit.*, p. 306; 韓載德 앞의 책, 236쪽.

상결정을 지지했다는 주장이다. 고준석의 회고에 의하면 “미국이 새로운 식민지로 남한을 만들지도 모르는 상태이므로 우리 스스로 자주독립을 이룩하는 최대한 방책은 삼상결정을 지지하는 길 밖에 없다”³⁶⁾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미군정 분석에서도 탁치를 거치면 “공산주의자가 지배하는 조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기에”³⁷⁾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당시 국내정세에서 좌익의 조직력이 우익의 그것보다 강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탁치가 실시되면 공산주의자가 지배할 수 있다고 공산주의자들이 판단했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내적 상황인식에서 전환의 동기를 구하는 공산화 기도설과 헤게모니 쟁탈설은 각각 장기적 권력 장악 인식과 단기적 주도권 장악 기도에 조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단기적 관점을 포괄한 권력투쟁 시각에서의 종합이 가능하다. 주도권 장악이라는 단기적 목적과 공산사회 건설이라는 장기적 목적은 모두 최종적으로 권력투쟁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도권 장악과 공산화는 권력 장악이라는 보다 큰 목적에 복무하는 수단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장단기적 목적에 복무하는 수단으로서의 노선전환은 보다 큰 목적인 ‘권력투쟁과정에서의 승리에 복무하는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권력투쟁설’의 입장에서 볼 때, 노선전환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 이외의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러한 목적 때문에만 노선전환을 하였을까? 그렇지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권력투쟁설’이 ‘명분론적 검토설’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모든 힘을 오로지 권력 장악에만 기울이는 인간형이 공산주의자라면 그들이 내세우는 대의명분은 권력 장악의 수단이므로 ‘공허한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를 대의명분을 떠나서 존재하는 전적으로 ‘권력지향적이기만한 인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들은 이념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이념만을 배타적으로 보거나 권력욕만을 보는 극단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보기에는 공산주의자의 정책결정이 너무 복잡적이므로 부분적 설명을 넘어선 보다 포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명분론적 검토설’과 ‘권력투쟁설’은 각각 이념과 현실만을 보는 극단적인 가설로서 상호 보완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한다.

36) 高峻石, 前掲書(1972); 고영민, 앞의 책, 98쪽.

37) “HUSAFIK,” part II, chapter II, p. 13.

즉 공산주의자가 내적으로 고민한 결과, 모스크바 결정이 당시 국제정세의 순리에 부합되는 것이며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노선 전환을 하였던 것이다.

‘내적인식설’의 설명을 마감함에 있어 또 하나 명심해야 할 초점은 이 시각이 ‘지령설’과 복합적으로 설명되어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용’과 ‘내적 인식’이 함께 있었다면 그들은 배타적이 아닌 종합적인 요인의 일부인이었다. 다음 단락에서 3가지 가설(‘중용설’·‘명분론적 검토설’·‘권력투쟁설’)을 종합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IV. 맺음말: 절충론적 종합과 정설의 수정

이상과 같이 각 가설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확증이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타당한 설명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각기 부분적 타당성 밖에 가지지 못한다. 또한 각 가설을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완적·복합적으로 보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모스크바 결정이 탁치안 중심으로 보도되자 공산당은 탁치안이 소련의 단독 구상이었다고 잘못 인식하였으며(‘지령설’의 요소), 탁치가 독립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 후 발견하고(‘명분론적 검토설’의 요소), 내적 인식을 가다듬으려고(‘내적 인식설’의 요소) 공식태도 표명을 보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전선을 구축하거나(‘명분론적 검토설’의 요소) 아니면 주도권을 탈취하기 위하여(‘헤게모니쟁탈설’의 요소) 인공·임정간 합작을 제외하나, 이의 실패를 경험했다. 결국 소련의 협조요청을 받고(‘지령설’의 요소)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통일에 유리하기도 하며(‘명분론적 검토설’의 요소) 공산정부의 수립에 유리하다는 판단(‘공산 화기도설’의 요소)을 하게 되어 노선을 전환하였다.

결국 조공의 내적 인식이 상황적 요인이었으며 소련 중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황적 요인을 발전시켜 동기를 유발한 주요한 요인인 것이다.³⁸⁾

38) 그런데 내적 고민과 소련의 중용 중에 어느 변수가 더 중요했을까? 원래는 내적 고민이 더 중요했겠지만, 소련의 지령에 가까운 강력한 중용에 접한 후 내적 고민 보다 외적인 힘에 의해 노선

즉 방향전환의 동기가 오로지 소련의 ‘지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지령이 아닌 중용의 형태로 12월 말 경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소련의 협조요청 이외에도 내적 인식이 정책결정에 크게 작용하였다. 권력투쟁적 인식(임정에 대한 헤게모니 탈취, 공산화기도 인식) 과 모스크바 결정이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이념적 인식에 비교적 시간을 갖고 고민하다가 임정과 의 통일공작도 무산되고 소련의 협조요청이 있자 반탁에서 지지노선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정설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조선공산당은 모스크바결정이 전해지자 이 결정이 소련의 것이라는 설도 있고 해서 여러 날의 신중한 검토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임정·인공간의 통일공작도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급박하게 소련이 중용하자 방향전환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반탁운동을 주도하는 임정에 맞서 권력투쟁과정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정부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반탁에서 ‘모스크바결정지지’노선으로 전환하였다.

하나의 역사적 결과를 단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여러 요인의 복합적 결과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위를 다시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공은 소련의 중용과 국내정치에 대한 인식 때문에 반탁에서 ‘모스크바 결정 지지’로 수일간의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결정과정은 신중하였으나 하급당부에 내린 노선전환 지시는 매우 급하게 전해졌다. 따라서 1946년 1월 3일의 집회에서처럼 하루아침에 표변한 것처럼 보였다. 당시 대중들과 언론은 내적 인식은 보지 못하고 급박한 지시가 있게 한 외적인 힘(=소련의 중용)만을 부각시켜 과대평가했다.

따라서 조공의 노선전환은 대중적 반탁감정을 의식한 당내인사들로부터도 거센 반발을 받았으며³⁹⁾ 우익은 조공을 ‘국론통일의 교란자’니 ‘매국노’니 하면서 질타

을 전환한 느낌이 짙다. 따라서 내인과 외인은 국면에 따라 힘의 크기가 변화되는 가변적인 것이며, 이러한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변적이며 복합론적인 유기체적 인식이 필요하다.

하였다.40) 거기에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즉시 독립을 열망하는 대중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조공의 노선전환은 신탁을 반대하는 민족 감정과 얼마간 융합할 수 없었다. 당시 남로당 경상북도당 조직부 간부였던 박진목은 “반탁에서 찬탁으로 공산당이 태도를 돌변하자 지방좌익단체들은 그 수습이 곤란했다”고 회고했다.41) 또한 충남 인민위원회와 산하 인민위원회들의 특별모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산당 외곽단체들은 노선전환 후 인기를 상당히 잃었다.42)

결과적으로 좌익은 한동안 정국의 주도권을 우익에게 넘겨주고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43) 주도권 획득을 위하여 노선전환 하였으나,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주도권 상실)를 초래하였다.44) 여기서 조선공산당의 전술적 실수를 지적할 수 있다. 조공의 한 내부분건에 의하면 “急角度的 戰術轉換”을 함으로서 “左翼은 大衆에 대한 無責任한 豹變的 背信者로서 自己를 暴露하고 말았든 것이다”라고 평가되었다. 이어서 “「託治反對」의 豫備宣傳을 通하여 召集된, 三日 示威의 群衆은 意外에도 「託治支持」를 보고서, 極端의 不平과 憤懣을 表示하였으며 市民側動員은 大部分이 脫退하고 말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45)

반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비교적 일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미국 보도에 의하여 ‘반탁감정이 조성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대중을 지지노선의 기치 아래 효과적으로 결집시켰다.46) 따라서 남북 공산당의 대중 동원 능력도 역전되기 시작했으며 보다 나은 조건에서 활동해온 북한 공산당이 남한 공산당을 압도하기 시작

39) 고준석에 의하면 “일제의 식민지로 부터 국제식민지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까 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한다. 高峻石, 前掲書(1972), 113頁; 고영민, 앞의 책, 97쪽; 고준석(저)/편집부(역), 『민족통일투쟁과 조선혁명』(힘, 1988), 108쪽. 박일원도 같은 맥락에서 주장하고 있다. 朴駟遠, 「美蘇共委와 南勞黨의 欺瞞(上)」

40) 이완범, 앞의 논문(1987), 297쪽의 주 <260>.

41) 박진목, 『내 조국 내 산하』(창진사 1976), 86 쪽

42) “Trusteeship,” Second Draft, RG 332, Box 65, Washington National Records Center, p. 23; 이 동현, 앞의 책, 105쪽.

43) 이완범, 앞의 논문, 298쪽의 주 <265>.

44) 따라서 신복룡 교수는 주도권 싸움으로 노선전환을 설명하는 데에는 미진함(한계)이 있다고 주장한다. 신복룡, 앞의 책, 316쪽.

45) 이어서 3일 시위는 연기되어야 했다고 주장되었다. комму니스트, 「『託治』問題와 左翼의 自己批判(1946년 1월 8일), 5쪽,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편), 앞의 책, 441쪽.

46) 이완범, 『해방3년사의 쟁점』, 박명립(외), 『解放前後史의 認識(6)』(한길사, 1989), 104 쪽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탁치 이슈는 남한 지역에서 조선공산당의 힘을 약화시키고 북한 지역에서 조선민주당을 몰락시켜 냉전구조의 국내적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오보를 확대보도한 미국의 의도가 ‘반소·반공’의 이데올로기 전파와 공산당 약화에 있었다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미국의 의도는 탁치문제를 통하여 완벽하게 구현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논구한 외적 지령설(소련지령설)과는 또 다른 ‘외적작용설’로서의 ‘미국음모설’을 연구가능한 가설로서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단지 추론이지만 석연치 않았던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연구자는 이 가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후의 연구를 위하여 그 대강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비판적 첨언을 부기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음모의 대강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한국민의 탁치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이 고의적으로 흘렸을 지도 모르는) 1945년 10월 빈센트 발언에 대한 한국민의 대응에서 반탁감정을 간파한(아니면 의도적으로 조장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것이 대중의 일치된 감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공산당을 대중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공작의 최고 목표아래, ‘소련탁치주장설’이라는 오보를 모스크바와 멀리 떨어진 워싱턴에서 만들어 지금으로 전송하여 조공이 노선 전환을 하게끔 조장했다. (이 과정에서 탁치=제국주의적 위임통치라는 한국인의 최초 인식을 조장하였는지 아니던 간에) 모스크바 전문보도 이전의 왜곡 보도를 계속 흘려 모스크바 결정의 중심은 탁치에 있으며 역시 ‘탁치는 즉시 독립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기존인식을 확산시켰다. ‘소련탁치주장설 오보에 노선전환의 계기를 가졌던 조공은 소련의 중용도 접하고 내부적인 논리도 검토한 끝에 노선전환을 시도하나 미국의 공작에 이용당해 대중으로부터 고립되었다. 즉 모스크바 결정의 중심이 탁치 아닌 임정수립과 후견에 있다거나 후견은 독립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좌익의 주장을 미국은 무력화시켜 좌익을 매국노로 몰게 만들면서 대신 이전까지 수세에 몰려 있던 우익을 반탁-민족세력으로 복권시켰다.

만약 음모가 있었다면 과연 음모의 주체는 누구였을까? 미군정이 오보를 믿었던 사실이 정확하다면 음모는 주둔사령관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본국의 공작부서에서 온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내 고위 당국자(국무부의 대소타협주의적인 국제주의자들에 반대하여 냉전의 대두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한 메카시즘적인 반공주의자)⁴⁷⁾를 공작의 주체로 간주할 수 있다. 1945년 10월에 탁치를 누설했던 전력이 있었던 빈센트는 1946년 1월 19일자 NBC 방송을 통해 “모스크바 3상협정은 소련의 구도였다”라는 요지의 내용을 발표해⁴⁸⁾ 이전의 오보들에 힘을 실어주었으므로 그에게 혐의를 돌릴 수 있다.

또한 음모는 과연 어떠한 결과를 노렸을까?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좌익 약화와 우익 강화, 반소운동과 반공운동의 조장 등이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좌익에게 방향전환을 직접적으로 지령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으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유도하였다는 것이 음모설의 관점에서 본 해석이다. 즉 좌익세력이 방향전환을 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조선 내 정치세력의 좌우분열을 고의적으로 조장하여 좌익을 약화시키고 사분오열된 우익을 결집시켰다. 따라서 음모는 효과적으로 성공하였으며, 음모가 없이 정당한 보도가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성과는 달성되기 어려웠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음모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은 반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모설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좌우 분열을 의도했던 미국의 ‘신탁통치시나리오’에 조선공산당은 냉철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즉자적으로 대응하여 이용당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⁹⁾

1945년 10월 중순의 탁치 보도는 대중들의 반탁감정을 형성하게 했으며 12월 27일 소련의 탁치주장설 오보는 반소 감정으로 비화되었다. 해를 넘긴 1946년 1월 2~3일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영향 하에서 ‘찬탁’으로 방향전환하자 반탁-반소-반공감정은 연결되었고 1월 16일 《동아일보》, 《대동신문》 등의 박헌영 존스톤(Richard J. H. Johnston) 회견기사 왜곡 소련 일국의 신탁통치를 희망하며

47) 이들은 번스의 대소유화적 정책결정을 소련과 내통한 불순분자의 행동으로 치부했다.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역사비평사, 1991), 313 쪽에도 ‘국무부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작전’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소개되어 있다.

48) “HUSAFIK,” part II, chapter IV, pp. 81-83.

49) 이완범, 앞의 논문(1989), 104-105 쪽

10~20년 내에 조선의 소련연방화 추진⁵⁰⁾은 박헌영이 대표로 있던 조선공산당을 ‘친소분자들의 집합소’라는 이미지와 동일시하는데 기여하였다.⁵¹⁾ 따라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조공은 신탁통치 파동으로 인해 대중적 지지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언론의 반좌익 공작과 음모가 있었다면 이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도 누차 지적한 바와 같다.

그렇지만 음모설은 노선전환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가설로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평자는 조선공산당의 ‘표변 과 음모는 전혀 별개의 사실이며 함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⁵²⁾ ‘음모는 노선전환의 결정적 계기를 조성해 주었을 뿐 결정적 원인은 되지 못했다. 또한 소련이 중용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소련이 모스크바 결정에 열의가 없었다면 노선전환의 계기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조공은 계속 반탁의 입장에서 서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련의 중용과 조공의 내부적 인식이 중요한 원인이었으며, 미국의 음모는 이들 원인들을 조장시킨 한 배경에 불과하다는 것이 음모설을 논구한 본 연구자의 잠정적 결론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매일신보》, 《中央日報》, 《解放日報》

고영민, 『해방정국의 증언: 어느 혁명가의 수기』, 서울: 사계절, 1987.

고준석(저)/유경진(재구성), 『아리랑고개의 여인: 어느 조선 여성운동가를 회상하며』, 서울: 한울, 1987.

-
- 50) 정용욱, 「1945년 말 1946년 초 신탁통치 파동과 미군정」, 『역사비평』 통권 62호(2003년 봄) 302쪽. 뉴욕타임즈 존스톤 특파원과 회견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박헌영은 한국이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발전될 것이라는 정치적 견해와 신탁통치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존스톤은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했으며 미군정은 이 왜곡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 51) 이런 상황에서 1946년 1월 24일 밤 모스크바의 타스통신은 탁치의 원래 제안자는 미국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여 반탁과 반소의 고리를 끊으려 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미군정의 통제로 즉각 보도되지 않았으며, 대중들의 반탁·반소 감정을 완전히 일소시키지는 못했다.
- 52) 신복룡, 「이완범의 「조선공산당의 탁치안에 대한 태도변화」에 관한 논평」,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토론장(1995년 12월 14일). 또한 본 연구자의 복합론적인 가설이 논지가 선명하지 않은 산만한 모자이크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논평에 대해 본 연구자는 단선론적인 설명이 가지는 ‘단정적 인식’에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고준석(지)/편집부(역), 『민족통일투쟁과 조선혁명』. 서울: 힘, 1988.
- 김종규, 『한국근현대사의 이데올로기』. 서울: 논장, 1987.
- 朴甲東, 「내가 아는 朴憲永(73): 표변한 反託」. 《中央日報》 1973년 5월 22일.
- 朴甲東, 「내가 아는 朴憲永(77): 蘇聯領事館의 조중」. 《中央日報》 1973년 5월 26일.
- 朴甲東, 『朴憲永』. 서울: 인간사, 1983.
- 朴駟遠, 「美蘇共委와 南勞黨의 欺瞞(上)」. 《大東新聞》 1947년 10월 28일.
- 朴駟遠, 『南勞黨批判(上)』. 서울: 極東精版社, 1948.
- 朴鍾晟, 『朴憲永論』. 서울: 인간사랑, 1992.
- 박진목, 『내 조국 내 산하』. 서울: 창진사, 1976.
- 서중석, 「반탁투쟁과 자주적 통일민주국가 건설의 좌절」. 李泳禧先生華甲記念文集編輯委員會 編, 『李泳禧先生華甲記念文集』. 서울: 두레, 1989.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1.
- 신복룡, 「이완범의 「조선공산당의 탁치안에 대한 태도변화」에 관한 논평」.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 학술회의 토론장, 1995년 12월 14일.
-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 서울: 한울, 2001.
- 심지연, 「反託에서 贊託으로: 남한 좌익진영의 탁치관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2집 2호, 1988.
- 李剛秀, 「三相會議決定案에 대한 左派3黨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집, 1995.
- 이동현, 『한국신탁통치연구』. 서울: 평민사, 1990.
-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문제, 1943~46」. 김남식(외), 『解放前後史의 認識(3)』. 서울: 한길사, 1987.
- 이완범, 「해방3년사의 쟁점」. 박명림(외), 『解放前後史의 認識(6)』. 서울: 한길사, 1989.
- 李昊宰, 『韓國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 서울: 法文社, 1969.
- 정용욱, 「1945년 말 1946년 초 신탁통치 파동과 미군정」. 『역사비평』 통권 62호, 2003년 봄.
- 조규하(외), 『남북의 대화』. 서울: 한얼문고, 1972.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하)』. 서울: 중앙일보사, 1992~1993.
- 崔相龍, 『美軍政과 韓國民族主義』. 서울: 나남, 1988.
- 하성수(역음), 『남로당사』. 서울: 세계, 1986.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편), 『朝鮮共產黨文件資料集(1945~46)』. 춘천: 翰林大學校 出版部, 1993.
- 韓載德, 『金日成을 告發한다』. 서울: 內外文化社, 1965.

- “Communist Party Instruction on Moscow Decision”(3 January 1946), Inclosure No. 2 to XXIV Corps, in HQ USAFIK, “Weekly Summary,” No. 32(24 April 1946).
- “Trusteeship,” Second Draft, RG 332, Box 65, Washington National Records Center.
-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Vol. 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Suh, Dae-Sook,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 1946*, Vol. VIII. Washington, D. C.: USGPO, 1971.
-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History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Manuscript i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 C., Seoul and Tokyo, 1947, 1948.
-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eriod of September 1945 to 30 June 1946.” Manuscript in the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 C. ·Seoul: Office of Administrative Service, Statistical Research Division, 1946~1947.
- 高峻石, 『南朝鮮労働黨史』. 東京: 勁草書房, 1978.
- 高峻石, 『朝鮮 1945~1950 革命史への證言』. 東京: 三一書房, 1972.
- 高峻石, 『アリアン峠の女: 朝鮮女性革命家への回想』. 東京: 田畑書店, 1974.
- 金南植, 「南朝鮮労働黨の統一政策と戰略 戰術」, 金南植·櫻井浩(共著), 『南北朝鮮労働黨の統一政府 樹立闘争』.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1988.

● 투고일 : 2005. 4. 13.

● 심사완료일 : 2005. 5. 19.

● 주제어(keyword) : 신탁통치(trusteeship), 조선공산당(Korean Communist Party), 박헌영(Park Hun Young), 김구(Kim Ku), 대한민국임시정부(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조선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Korea)